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 현황 .....	2
3. 일인당 GRDP 격차 세부 요인별 분석 .....	4
4. 시사점 .....	8
<b>【HRI 경제 통계】</b> .....	12

## &lt; 요약 &gt;

## ■ 개요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지역별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에 실패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도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일인당 GRDP를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 현황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준편차, 범위 등으로 측정한 지역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의 일인당 GRDP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일인당 GRDP 불균등도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상승하여 30개국 중에서 6위 수준이다.

## ■ 일인당 GRDP 격차 세부 요인별 분석

일인당 GRDP 격차는 노동생산성,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 격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인당 GRDP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다.**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 간 격차는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16개 전 지역에 걸쳐 취업자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30개국 중에서 5위 수준으로 일인당 GRDP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울산은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다른 지역들을 크게 상회하여 전국 최고의 일인당 GRDP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의 투자 규모 차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효과,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 유출 차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격차 확대 효과가 격차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상회하기 때문에 **일인당 GRDP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시사점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중앙정부는 지역 간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소재 대학-기업-지자체 간의 지역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확충하고, 청년층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1. 개요

○ (연구 배경) 지역 간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지역 간 경제 성장의 불균형은 소득 양극화 및 삶의 질 저하를 초래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sup>1)</sup>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지역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
  - 경제적 편중은 다른 부문으로도 파급되어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교육 여건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

- 일인당 GRDP 격차 확대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
  -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참여 증대를 통한 민주성 제고,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sup>2)</sup>
  -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에 실패한다면 상기의 성과도 지속될 수 없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연구 목적)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일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요인을 노동생산성,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구분하여 분석<sup>3)4)</sup>

$\begin{aligned} \text{일인당 GRDP} &\equiv \frac{\text{GRDP}}{\text{인구}} = \frac{\text{GRDP}}{\text{취업자}} \times \frac{\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frac{\text{생산가능인구}}{\text{인구}} \\ &= \text{노동생산성} \times \text{취업자 비중}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text{생산가능인구 비중} \end{aligned}$
<p>*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취업자</p>

- 1)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추진. 또한 세종시가 출범하였고,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지방이전을 시작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 최근 정부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광역자치단체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 2)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허문구(2006)는 일인당 GRDP를 취업자 일인당 지역내 순생산, 취업률, 지역내 순생산 대비 GRDP 비중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음.
- 4) 한국과 OECD 국가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한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벨3를 기준으로 비교. 다만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 격차는 한국의 레벨2와 OECD 국가들의 레벨2를 비교했음에 유의.

## 2.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 현황

○ 일부 지역의 일인당 GRDP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울산, 충남 등의 일인당 GRDP는 전국 평균(2,300만원)을 크게 상회

- 울산(GDP의 4.6% 차지)은 일인당 GRDP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4,600만원)을 유지
- 충남(GDP의 7.2% 차지)은 가장 높은 증가율(7.3%)을 기록하여 16개 지역 중에서 울산에 이어 2위(3,900만원) 수준
- 한편 서울(GDP의 22.4% 차지)과 경기(GDP의 21.8% 차지)의 일인당 GRDP는 각각 2,500만원, 2,100만원 수준에 불과

- 표준편차, 범위 등으로 측정한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는 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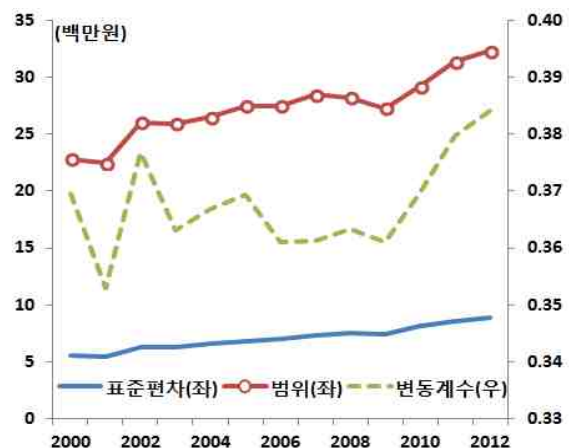
- 일인당 GRDP의 표준편차는 2000년 550만원에서 2012년 882만원으로, 동일기간 범위(range)는 2,28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증가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sup>5)</sup>는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0.384 수준

< 지역별 일인당 GRDP 현황 >



자료: 통계청(2005년 불변가격 기준).  
주: 2001~2012년 연평균 증가율.

< 일인당 GRDP 격차 추이 >



자료: 통계청(2005년 불변가격 기준).  
주: 1) 범위 = 최대값 - 최소값  
2)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

5)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비교집단 자료들의 평균이 같다면 표준편차를 통해 산포도를 알 수 있지만, 만약 평균이 다른 경우에는 산포도의 정도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용(출처: 통계청).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가 큰 편에 속함

- 지니계수로 측정된 지역별 일인당 GRDP 격차는 갈수록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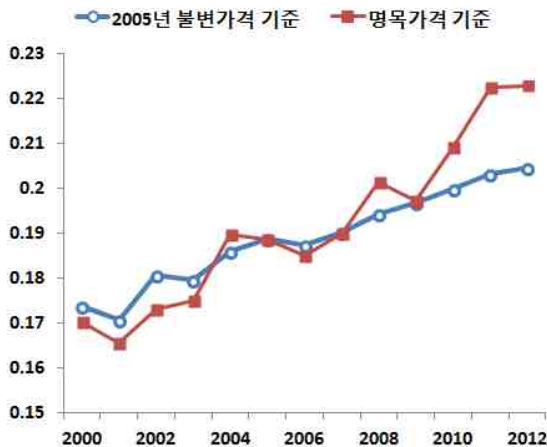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일인당 GRDP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명목 일인당 GRDP로 측정된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2로 불변가격 기준보다 빠르게 상승

\* 단, 지역의 크기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수치임에 유의

- 한국의 일인당 GRDP 격차는 OECD 30개 국가들기 중에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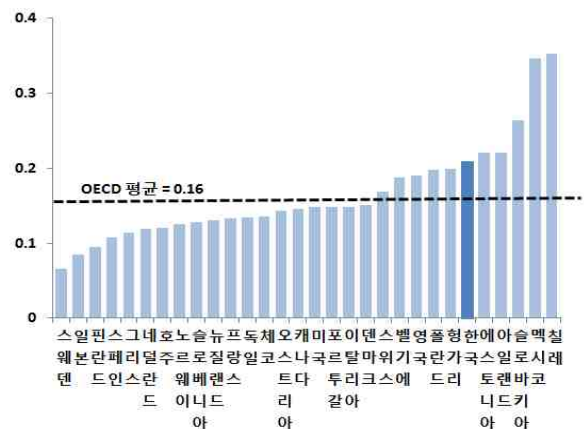
-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하고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6위 수준

< 일인당 GRDP 지니계수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지니계수가 클수록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

< 지니계수의 OECD 비교(2010년 기준) >



자료: OECD(2005년 불변가격, 구매력 달러 기준).  
주: 지니계수가 클수록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

- 6) 지니계수  $G = \frac{2}{N-1} \sum_{i=1}^{N-1} |F_i - Q_i|$ ,  $F_i = \frac{i}{N}$ ,  $Q_i = \sum_{j=1}^i Y_j / \sum_{i=1}^N Y_i$ ,  $Y_i = i$ 지역의 일인당 GRDP,  $N =$  지역 수를 의미. 지역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모든 지역의 일인당 GRDP가 동일하면  $G = 0$ 이고 격차가 확대될수록 1에 근접함.
- 7) OECD 각 국가별 지역 분류 기준은 <별첨> 참조.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는 레벨2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레벨3 적용하여 일인당 GRDP 지니계수 산출.
- 8) OECD의 지니계수는 불변가격(2005년 기준), 구매력 달러 기준으로 산출. 한편 통계청의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지니계수는 불변가격(2005년 기준), 원화 기준임. OECD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한 2010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21이나 통계청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0.20으로 0.01의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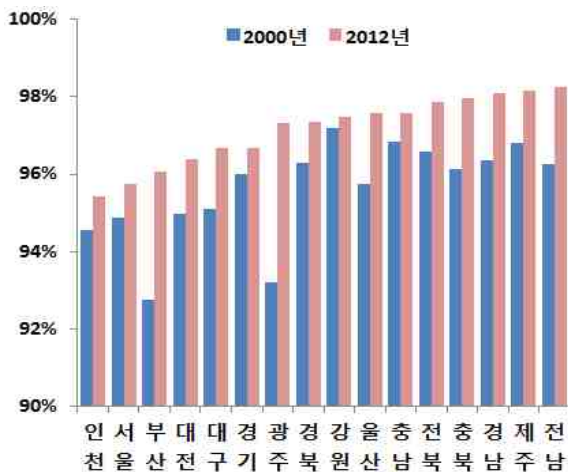




②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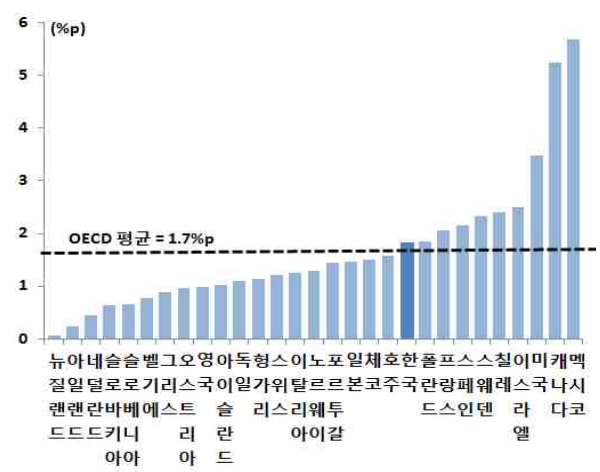
-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 비중이 상승하였고, 격차 또한 감소하고 있음
  - 16개 지역에서 2000년에 비해 2012년 취업자 비중은 상승하였고, 2012년 기준 전남, 제주 등이 높고 인천, 서울 등이 낮음
  - 최고 비중 지역과 최소 비중 지역 간의 격차는 2000년 4.4%p에서 2012년 2.8%p로 감소
  - 표준편차로 측정한 격차는 2000년 1.3%p → 2012년 0.9%p로 변동계수로 측정한 격차는 2000년 0.013 → 2012년 0.009로 감소
  
- 한국은 취업자 증가율 격차가 OECD 평균을 상회<sup>10)</sup>
  - 한국의 취업자 증가율 최대지역에서 최소지역을 뺀 격차는 1.8%p로 OECD 평균인 1.7%p를 약간 상회
  - 한국은 OECD 29개국 중에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등에 이어 10위 수준에 해당

< 지역별 취업자 비중 >



자료: 통계청.  
 주: 취업자 비중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OECD 국가의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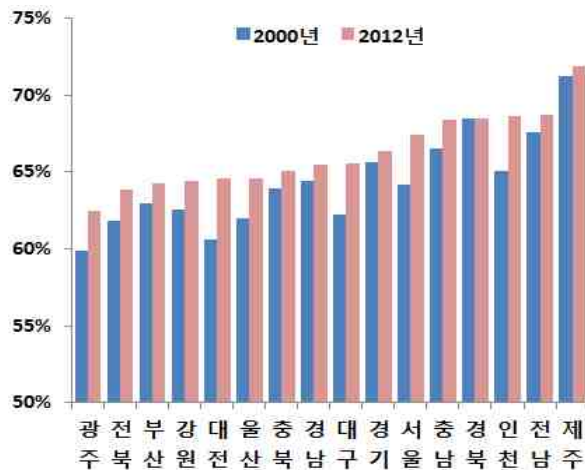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1999~2012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2) 격차=취업자 증가율 최대지역-최소지역.

10) OECD 국가의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 격차를 비교할 때 레벨2를 활용. 한국의 지역 분류 중 레벨2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지역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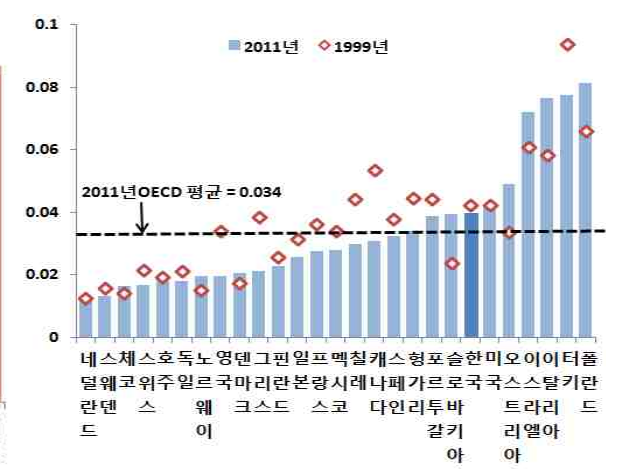
③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전 지역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가운데 지역 간 격차는 감소
  -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00년에 비해 2012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고, 2012년 기준 전남, 제주 등이 높고 광주, 전북 등이 낮음
  -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격차는 2000년 11.3%p에서 2012년 9.4%p로 축소
  - 표준편차로 측정한 격차는 2000년 3.0%p → 2012년 2.5%p로, 변동계수로 측정한 격차는 2000년 0.047 → 2012년 0.037로 감소<sup>11)</sup>
  
-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지니계수는 OECD 27개국 중에서 7위<sup>12)13)</sup>
  -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지니계수는 1999년 0.042 → 2011년 0.040으로 소폭 감소(지역 간 격차 완화)
  -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0.034)을 상회하고 있으며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미국 등과 유사한 수준

<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



< 경제활동참가율 지니계수의 OECD 비교 >



자료: 통계청.

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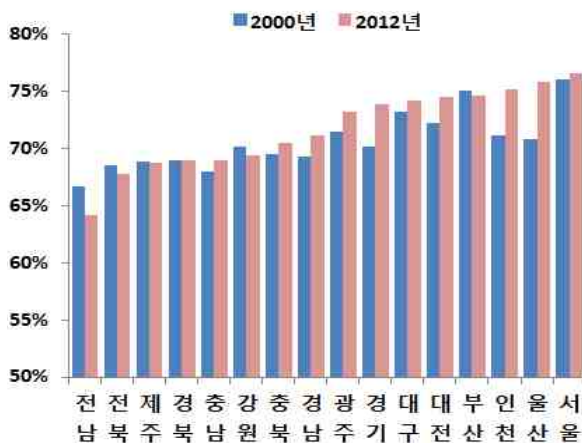
주: 지니계수가 클수록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

11)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의 격차와 비교할 때 범위, 표준편차, 변동계수 측면에서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  
 12) 경제활동참가율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터키, 포르투갈, 캐나다, 칠레, 멕시코, 영국, 호주, 스위스 등 8개국은 레벨2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레벨3 적용.  
 13) 경제활동참가율 지니계수의 산출방법은 일인당 GRDP 지니계수 산출방법과 동일.

④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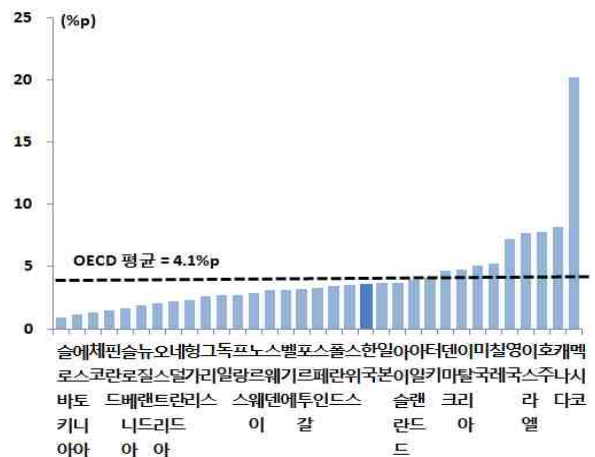
- 5개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하였고, 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
  - 2000년에 비해 전남, 전북, 제주, 강원, 부산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였고 서울, 울산 등이 상위권에 위치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격차는 2000년 9.5%p에서 2012년 12.4%p로 확대
  - 표준편차로 측정한 격차는 2000년 2.5%p → 2012년 3.5%p로, 변동계수로 측정한 격차는 2000년 0.036 → 2012년 0.049로 증가
-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고령인구의 지역별 증가율 격차를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약간 하회<sup>14)</sup>
  -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함
  - 그러나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과 가장 느린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3.6%p 수준
  - 이는 OECD 평균인 4.1%p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33개국 중에서 14위

<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



자료: 통계청.  
주: 생산가능인구 비중=15~64세 인구/총인구.

< OECD 국가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격차 >



자료: OECD.  
주: 1) 1995~2012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2) 격차 = 증가율 최대지역 - 최소지역.

14) OECD 33개국 모두 레벨3 적용.

⑤ 종합

- 일인당 GRDP의 지역 간 격차 확대는 주로 노동생산성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가 확대된 데 기인<sup>15)</sup>
  -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여 일인당 GRDP 격차 축소에 기여
  - 노동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일인당 GRDP 격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울산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상위권으로,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음에도 전국 최고의 일인당 GRDP 유지
- 노동생산성 격차는 자본투자 문제, 생산가능인구 격차는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의 유출 문제와 직결
  - 지역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는 지역 간 자본투자 규모의 차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
  - 또한 지역별 교육 및 고용 여건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4. 시사점

- 첫째, 일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인당 GRDP 격차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는 역사, 지리적 입지, 자원 분포,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제도가 달성한 성과도 위협받을 수 있음

15) 한국은 지역별 노동생산성 격차(5위), 취업자 증가율 격차(7위)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일인당 GRDP 격차(6위)가 OECD 30개국 중에서 상위권에 위치. 다만 경제활동참가율 격차(10위), 고령인구의 지역별 증가율 격차(14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 둘째, 일인당 GRDP 격차 완화를 위해서 지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개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협력을 유도
  -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기업의 CEO와 같은 경영 마인드를 함양할 필요
  - 지역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역 간 갈등 중재자의 역할 강화
  
- 셋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기업-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
  - 지자체는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울산의 현대차·현대중공업, 포항의 포스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성공 여부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 혹은 육성과 밀접하게 연관
  
- 넷째,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 및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GRDP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일자리 부족 → 소득창출 기회 부족 → 청년층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지방 경제의 근간을 훼손
  - 청년층 인구 유입 → 저출산·고령화 속도 지연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개발 정책과 인구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출산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부여 **HRI**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031-288-7970)  
 안중기 선임 연구원 (joonggiahn@hri.co.kr, 031-288-7973)

【별첨】

< OECD 국가별 지역 레벨에 따른 지역 수 >

국가	레벨2	레벨3	국가	레벨2	레벨3
호주	8	60	일본	10	47
오스트리아	9	35	한국	7	16
벨기에	3	11	룩셈부르크	1	1
캐나다	13	288	멕시코	32	209
칠레	15	54	네덜란드	4	12
체코	8	14	뉴질랜드	2	14
덴마크	5	11	노르웨이	7	19
에스토니아	1	5	폴란드	16	66
핀란드	5	19	포르투갈	7	30
프랑스	22	96	슬로바키아	4	8
독일	16	96	슬로베니아	2	12
그리스	4	13	스페인	19	59
헝가리	7	20	스웨덴	8	21
아이슬란드	2	8	스위스	7	26
아일랜드	2	8	터키	26	81
이스라엘	6	-	영국	12	139
이탈리아	21	110	미국	51	179

자료: OECD.

**【참고문헌】**

- 고영선 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연구보고서(2008-03), KDI, 2008.12.
- 고용노동부, 「고용·경제 지표 바로가기」, 2014.04.
-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7.
- 이재형 외, 「시장구조조사」, KDI, 2011.10.
- 장재홍 외, 「한국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 연구보고서(2012-639), 산업연구원, 2012.12.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2009.12.
- \_\_\_\_\_, 「지역발전 주요 통계 자료집」, 2013.10.
- 한국은행,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14.02.
- 허문구, 「지역 간 소득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6.07.
- 통계청, 「2012년 지역소득(잠정)」, 보도자료, 2013.12.23.
- Akita, T. and M. Kataoka,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the Post War Japan」, 43rd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Jyvaskyla, Finland, August 27-30, 2003.
- Rey, S. J and M. V., 「Regional Convergence, Inequality and Spac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005.
- Yamamoto, D., 「Scales of Regional Disparities in the USA, 1955-2003」,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008.
- OECD, 「OECD Regions at a Glance 2011」, 2011.
- \_\_\_\_\_,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2013.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3 연간	2014				2015 연간(E)	
			1/4	2/4	3/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0	3.9	3.5	3.2	3.6	3.6	
	민간소비(%)	2.0	2.5	1.5	1.6	2.3	2.8	
	건설투자(%)	6.7	4.3	0.2	3.0	1.9	3.0	
	설비투자(%)	-1.5	7.3	7.7	3.9	5.7	5.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	799	151	241	227	800	680	
	통관 기준	무역수지(억 \$)	441	52	149	91	433	426
		수출(억 \$)	5,596	1,376	1,457	1,421	5,770	6,023
		증감률(%)	(2.1)	(1.7)	(3.2)	(3.9)	(3.1)	(4.4)
		수입(억 \$)	5,156	1,323	1,308	1,331	5,336	5,597
증감률(%)	(-0.8)	(2.0)	(3.2)	(5.6)	(3.5)	(4.9)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1.1	1.6	1.4	1.7	1.9	
실업률(%)		3.1	4.0	3.7	3.3	3.6	3.4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